

이달의 초점

지역 인구변화의 다층적 이해와 과제

지역 인구변동의 주요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 장인수 |

생애주기 사건과 지역 이동: 대학 진학, 취업, 결혼을 중심으로

| 이지혜A |

생활권 이동과 지자체 정책 체감

| 고제이 |

인구이동과 정주여건

| 강지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지역 인구변동의 주요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¹⁾

Region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이 글의 목적은 한국 지역 인구변동의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대응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살펴본 지역 인구변동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 인구의 자연적 감소 시기는 총인구가 감소한 2020년보다 20여 년 이상 이른다. 지역 인구의 사회적 감소는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볼 때 특히 20대 연령층의 순유출에 크게 기인한다. 지역 인구 규모를 비롯한 지역 인구구조 변화의 지역 및 권역 간 격차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무관하지 않다. 지역 인구변동의 주요 특성은 최근 지역 인구 감소 및 지역(권역) 간 격차 심화가 국가 의제로 부각될 필요성과 더불어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1 들어가며

한국은 최근 20여 년간 저출산 고착화, 급격한 인구 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 등 다각적인 인구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 및 이에 따른 인구 집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은 지역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순유출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청년층이 순유입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비수도권 및 농어촌 지역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 및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

1) 이 글은 장인수, 박종서, 황안나, 고제이, 이소영, 이지혜, 방설아, 어광수. (2025). 지역 인구 문제 대응 중장기 의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인수, 최인선, 김은지, 김은정, 이지혜, 황남희, 이지혜. (2024). 2024년 인구변동 모니터링 및 연보(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지혜, 장인수, 임준경, 김은정, 이지혜. (2025). 2025년 인구변동 모니터링 및 연보(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저자가 직접 작성한 일부 내용을 활용하여 작성한 것이다.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기 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

동의 특성은 지역 인구 규모의 부익부 빈익빈으로 이어져 지역 간 양극화를 촉발시킬 개연성도 다분하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 18개 지역을 인구관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행정적(특례), 재정적 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지역 인구변동에 대한 중앙정부의 본격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점이 노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관심지역의 인구는 대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수도권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가 각각 2019년과 2015년에 비수도권을 추월한 이후 권역 간 격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역적이고 단편적인 프로그램 중심의 대응이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 등 양질의 사회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반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동시에 인구 초고령화가 심화되어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으며, 거주민에 대한 기초 생활서비스 공급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이철 외, 2022). 이들 지역 인구변동은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력 저하를 비롯하여 공공서비스 수급 불균형 등 여러 지역사회가 경험할 수 있는 위험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지역 인구변동은 단순히 해당 지역의 고유 특성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대응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나타난 지역 인구변동의 특성을 간명하게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그간의 지역 인구변동 특성 및 유기적인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로의 전환 및 국가균형발전을 실효성 있게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 기인한다.

2 지역 인구변동의 주요 특성

가. 지역 인구의 자연적·사회적 증감

1) 자연적 증감

지역 인구의 자연적 증감 특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특히 지역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총인구의 자연적 감소보다 상당히 일찍 시작되었다는 점을 짚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00~2024년의 기간을 설정하고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례 지역(A지역)²⁾의 자연적 감소 양상을 비

2) 이 지역을 사례 지역으로 선정한 근거는 이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2000~2024년 인구 감소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인구 규모가 크지 않은 특성(구체적으로 같은 기간 인구 규모가 약 36.21% 감소(2024년 기준 5만 명 미만)이 보이며, 특히 자연적 감소가 오래전부터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자연적 증감 양상은 사례 지역(A지역)과 경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교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참고로 사례 지역 중 기초 지자체 A지역은 지난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총인구의 자연적 감소는 지난 2020년에 시작되어 2022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0년의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27만 2337명, 30만 4948명으로 자연적 증감이 처음으로 부(-)의 값을 보였다. 이와 비교하여 인구감소지역 사례 지역인 A지역의 경우 관측 시작 연도인 2000년에 출생아 수 506명, 사망자 수 1025명으로 이미 519명의 자연적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즉 A지역 인구의 자연적 감소는 2000년 이전에 시작되었음을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A지역 인구의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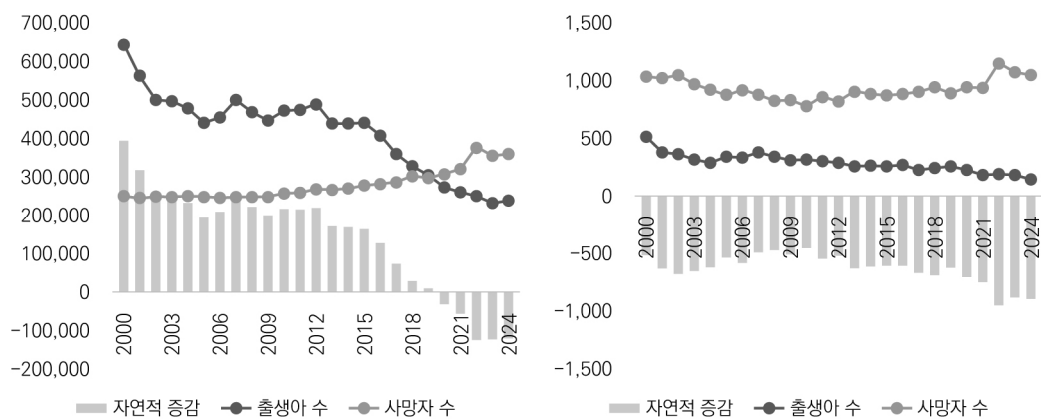
연적 감소 특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측 기간 내 A지역의 출생아 수는 약간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2000년 506명에서 2024년 142명으로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난 반면 사망자 수는 등락 반복과 다소 감소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2000년 1025명에서 2024년 1037명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A지역 인구의 자연적 감소는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와 사망자 수의 소폭 증가에 기인하고 있는데, 총인구의 자연적 감소보다 최소 20년 이상 빠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사회적 증감

다음으로 지역 인구의 사회적 증감 특성에 대해

[그림 1] 전국(왼쪽) 및 인구감소지역 사례 지역(A지역)(오른쪽) 인구의 자연적 증감 추세 (2000~2024년)

(단위: 명)



출처: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주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권역(수도권·비수도권) 및 연령대별 인구 유입과 유출 특성이 상이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수도권 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와 비수도권 중 인구 감소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광역시도 지역(부산, 대구,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2000~2024년 5세 단위 연령대별 순이동 추세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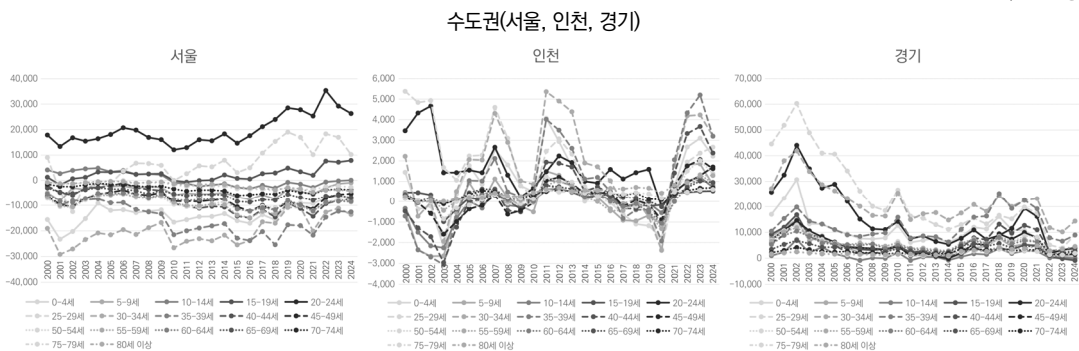
먼저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연령대별 순이동 특성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는 20~24세(짧은 대시 선), 25~29세(긴 대시 선)의 상반된 양상에 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지역 중 서울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20~24세, 25~29세 순유입 특성이 두드러지는 반면 이 글에서 살펴본 6개의 비수도권 사례 지역은 공통적으로 이들 연령층의 순유출 특성이 두드러지는, 소위 상반된 특성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

은 이지혜 외(2025)에서 제시하고 있는 89개 인구 감소지역 및 18개 관심지역(인구관심지역)의 5세 단위 연령대별 순이동 특성(2000~2024년)과도 대체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추가로, 앞서 살펴본 비수도권 사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20대 연령층의 순유출 특성은 20대 초중반(20~24세), 중후반(25~29세)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산과 대구는 20~24세에 비하여 25~29세의 순유출 특성이 보다 두드러지는 반면 전남과 경남은 반대로 25~29세보다는 20~24세 연령층의 순유출 특성이 큰 특징을 보인다. 20~24세와 25~29세 연령층은 동일한 청년층이지만, 각각 대학 진학 및 대학 졸업 이후 입직과 같이 생애주기 내 사건이 상이함을 고려하면 이들 지역의 청년층 유출 방지와 유입 도모를 위한 정책 설계가 각각 양질의 대학과 일자리를 보다 우선순위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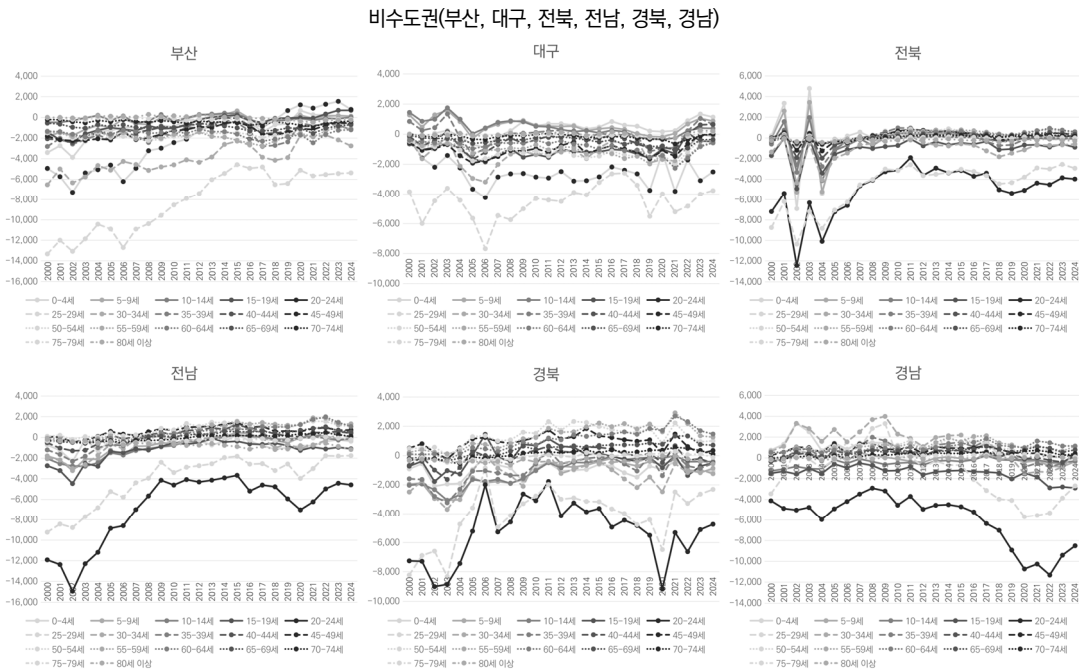
[그림 2]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과 비수도권 지역(부산, 대구, 전북, 전남, 경북, 경남) 5세 단위 연령대별 순이동 추세(2000~2024년)

(단위: 명)



[그림 2] 계속

(단위: 명)



출처: “국내인구이동통계”,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령 20~24세 순유출이 단기간 일시적인 양상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된다면 이들의 정책 수요를 고려한 양질의 대학 인프라 조성 및 프로그램 도입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 지역 일자리 문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 즉 오랜 기간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는 특정 연령대의 순유출 특성은 그 지역의 정책 수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이에 정책 우선순위 고려 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나. 인구변동의 지역 간 양극화

1) 인구 규모 변화

인구변동의 지역 간 양극화는 단적으로 시군구 단위 인구 규모의 변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지역과 그 이외의 지역 간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인구 규모가 감소한 지역은 228개 시군구(세종, 제주 포함)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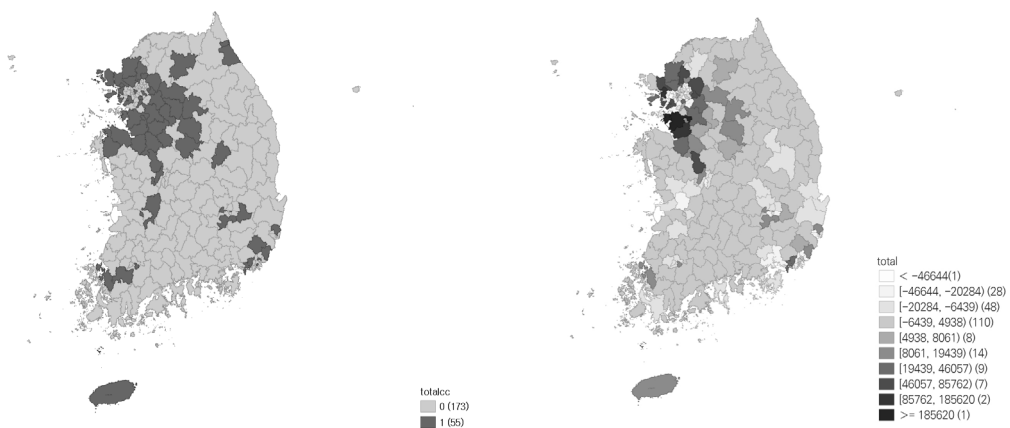
173개 지역, 증가한 지역은 55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인구가 증가한 지역(보다 진한 음영 지역)은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 인근 지역이며,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은 감소한 지역(보다 연한 음영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약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는 대체적으로 감소한 반면 수도권은 서울의 인구 감소가 경기와 인천 지역의 인구 규모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로 같은 기간의 인구 규모 변화를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자연적 감소 지역이 사회적 감소 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인구의 사회적 감소가 이미 1990~2000년

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청년층 감소에 따른 출생아 수 감소 및 남아 있는 이들의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수 증가가 결과적으로 자연적 감소로 이어져 최근 뚜렷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인수 외, 2021).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 주목하는 특성은 과거의 사회적 감소가 자연적 감소로 이어진 점이다. 20여 년 이전부터 젊은층 중심의 사회적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이후 앞서 나타난 젊은층의 사회적 감소가 이들 지역의 자연적 감소로 이어진 경향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자연적 감소 경향은 과거 지역 인구의 사회적 감소가 최근 지역 인구의 자연적 감소를 인과적으로 견인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림 3] 2018~2023년 시군구 단위 인구 증가-감소 지역(왼쪽), 인구 규모 변화(오른쪽)의 분포

(단위: 명)



주: 왼쪽 그림에서 연한 음영 지역이 2018~2023년 동안 인구가 감소한 곳으로, 인구 증가 지역보다 많음을 확인할 수 있음.

출처: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 “지역 인구 문제 대응 중장기 의제”, 장인수 외, 202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44~45에서 재인용함.

[그림 4] 2018~2023년 시군구 단위 인구의 사회적 증감(왼쪽)과 자연적 증감(오른쪽)

(단위: 명)



주: 왼쪽 그림에서 연한 음영 지역이 2018~2023년 동안 인구가 감소한 곳으로, 인구 증가 지역보다 많음을 확인할 수 있음.

출처: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 “지역 인구 문제 대응 중장기 의제”, 장인수 외, 202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44~45에서 재인용함.

2) 공간적 집중

지역 인구변동을 관측하고 분석할 때 인구 분포에 대한 공간적 집중을 살펴보는 것은 특정 지역의 인구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소위 특정 지역에 인구

가 집중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인구 분포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비롯하여 지역의 정책 수요를 고려한 자원 배분, 정책 설계 방향

[표 1] 시군구(229개) 인구의 공간적 집중: 2020년, 2023년, 2024년

(단위: km²당 명)

구분	2020년		2023년		2024년	
	시군구	인구밀도	시군구	인구밀도	시군구	인구밀도
인구밀도 상위 시군구	양천구(서울)	26,098	양천구(서울)	25,050	양천구(서울)	24,759
	동대문구(서울)	24,117	동대문구(서울)	23,998	동대문구(서울)	23,828
	동작구(서울)	23,922	동작구(서울)	23,157	동작구(서울)	22,978
	종량구(서울)	21,340	종량구(서울)	20,660	종량구(서울)	20,503
	광진구(서울)	20,318	광진구(서울)	19,666	광진구(서울)	19,455
	구로구(서울)	20,100	구로구(서울)	19,500	강동구(서울)	19,396
	송파구(서울)	19,720	송파구(서울)	19,310	구로구(서울)	19,292
	강동구(서울)	18,705	강동구(서울)	18,673	송파구(서울)	19,191
	금천구(서울)	17,798	금천구(서울)	17,471	연제구(부산)	17,561
성북구(서울)	17,787	서대문구(서울)	17,374	금천구(서울)	17,295	

[표 1] 계속

구분	2020년		2023년		2024년	
	시군구	인구밀도	시군구	인구밀도	시군구	인구밀도
인구밀도 하위 시군구	양구군(강원)	36	영월군(강원)	33	영월군(강원)	33
	영월군(강원)	36	양구군(강원)	32	양구군(강원)	31
	진안군(전북)	33	진안군(전북)	31	진안군(전북)	31
	정선군(강원)	32	청송군(경북)	28	청송군(경북)	28
	청송군(경북)	31	정선군(강원)	28	평창군(강원)	28
	화천군(강원)	30	평창군(강원)	28	정선군(강원)	27
	평창군(강원)	30	화천군(강원)	25	화천군(강원)	25
	봉화군(경북)	28	봉화군(경북)	25	봉화군(경북)	24
	영양군(경북)	22	인제군(강원)	19	인제군(강원)	19
인제군(강원)	20	영양군(경북)	19	영양군(경북)	19	
지니집중비(G)	0.78239		0.81307		0.81425	
델타지수(Δ)	0.63294		0.63449		0.63543	

출처: “2025년 인구변동 모니터링 및 연보”, 이지혜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54.

등과도 연관되어 있다. 인구밀도와 지니집중비,³⁾ 델타지수⁴⁾에 기반한 지역 간 인구 분포의 공간적 집중 정도는 지역 인구 분포의 불균형, 특히 수도권 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인구 집중의 특성을 간명하게 보여 주는데, 2024년 기준 시군구 단위 지니집중비는 0.81425, 델타지수는 0.63543로 2020년, 2023년에 비하여 모두 증가하였다. 이는 지역 인

구 분포의 공간적 집중도가 해당 기간 내에 증가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구 분포의 불균형 양상이 심화되었음을 시사한다.

3) 인구 고령화의 지역 간 차이

한국 인구구조 변화의 주요 특성 중 하나로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제시할 수 있지만, 지역 간 인구

3) 인구 누적 구성비와 면적 누적 구성비 좌표에서 공간적으로 완전한 균등 분포인 대각선 아래의 면적 대비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에 의해 만들어지는 면적의 비로 산출한다. 아래 산식에서 x_i 는 인구 누적 구성비, y_i 는 면적 누적 구성비를 의미한다. 원래 본 지표는 경제학에서의 소득불평등도를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이를 인구 분포의 집중 정도를 파악하는 데 응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떤 공간(지역) 내 인구가 얼마나 몰려 있는지 보여 주는 것으로 특정 국가의 인구가 모든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면 해당 지표는 0이며, 반대로 특정 지역에만 극단적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 거의 없다면 해당 지표는 1에 가깝게 된다.

$$- G = \left(\sum_{i=1}^k X_i Y_{i+1} \right) - \left(\sum_{i=1}^k X_{i+1} Y_i \right), \text{ 인구정책연구실(2022)에서 재인용하였다.}$$

4) 지니집중비(G)의 특수한 사례에 해당,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간 최대 수직거리를 산출한다. x_i 와 y_i 는 각각 인구 구성비와 면적 구성비이며, 지니집중비와 달리 비누적 수치이다. 앞서 살펴본 지니집중비가 전체 지역 간 인구 분포의 균등 및 불균등 분포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본 지표는 지역 집중 정도를 보다 강조하여 인구 집중이 더 많은 지역 특성을 민감하게 반영하게 된다.

$$- \Delta = \frac{1}{2} \sum_{i=1}^k |x_i - y_i|, \text{ 인구정책연구실(2022)에서 재인용하였다.}$$

고령화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0년 고령인구 비율은 광역시 지역이 12~19%, 광역도 지역이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2024년의 경우 모든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강원, 부산, 울산, 경남, 경북, 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이 더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5세 이상 인구 비율로 표현되는 초고령인구 비율 역시 비수도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기간 내 변화폭

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인구 고령화 심화에 따른 복지재정 수요 증대는 지방재정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정책 추진 여건 악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수도권, 비수도권의 인구 규모, 지역내총생산 추세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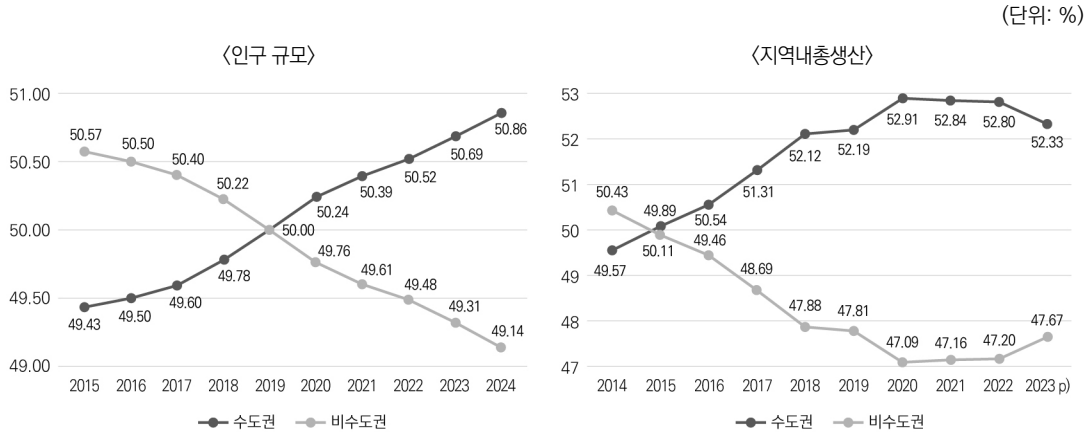
[표 2] 시도별 노인인구(65세 이상) 및 초고령 노인인구(85세 이상)의 분포: 2020년, 2024년

(단위: 명, %)

시도	65세 이상 인구						85세 이상 인구					
	규모			비율			규모			비율		
	2020년	2024년	변화	2020년	2024년	변화	2020년	2024년	변화	2020년	2024년	변화
서울특별시	1,476,752	1,768,926	292,174	15.35	18.83	3.48	113,565	158,954	45,389	1.18	1.69	0.51
부산광역시	628,265	755,837	127,572	18.72	23.15	4.43	48,925	66,712	17,787	1.46	2.04	0.58
대구광역시	388,159	468,502	80,343	16.08	19.9	3.82	33,229	46,602	13,373	1.38	1.98	0.60
인천광역시	397,682	517,081	119,399	13.48	16.96	3.48	37,147	50,629	13,482	1.26	1.66	0.40
광주광역시	204,430	245,336	40,906	13.82	16.86	3.04	19,428	25,002	5,574	1.31	1.72	0.41
대전광역시	205,913	253,047	47,134	13.8	17.18	3.38	19,619	26,222	6,603	1.32	1.78	0.46
울산광역시	137,641	181,492	43,851	12.08	16.46	4.38	10,108	13,279	3,171	0.89	1.20	0.31
세종특별자치시	32,051	42,659	10,608	9.20	10.96	1.76	3,256	4,341	1,085	0.93	1.12	0.19
경기도	1,720,279	2,213,665	493,386	12.79	15.97	3.18	163,684	227,110	63,426	1.22	1.64	0.42
강원특별자치도	304,107	368,832	64,725	20.02	24.3	4.28	31,829	43,671	11,842	2.09	2.88	0.79
충청북도	276,907	337,755	60,848	16.98	20.73	3.75	29,910	40,436	10,526	1.83	2.48	0.65
충청남도	389,832	460,769	70,937	17.91	20.72	2.81	47,543	64,087	16,544	2.18	2.88	0.70
전북특별자치도	371,529	423,488	51,959	20.58	24.08	3.50	44,019	57,090	13,071	2.44	3.25	0.81
전라남도	410,289	459,605	49,316	22.88	26.16	3.28	48,954	63,817	14,863	2.73	3.63	0.90
경상북도	550,943	642,635	91,692	20.78	24.74	3.96	61,815	81,129	19,314	2.33	3.12	0.79
경상남도	555,921	676,751	120,830	16.64	20.83	4.19	56,384	74,756	18,372	1.69	2.30	0.61
제주특별자치도	101,167	121,855	20,688	15.13	18.06	2.93	12,167	15,815	3,648	1.82	2.34	0.52
계	8,151,867	9,938,235	1,786,368	15.73	19.2	3.47	781,582	1,059,652	278,070	1.51	2.05	0.54

출처: "장래인구추계", 국가데이터처, 2023.12.; "2024년 인구변동 모니터링 및 연보", 장인수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150-151에서 수정 인용함.

[그림 5] 수도권·비수도권 인구·지역내총생산 비중 추세



주: 지역내총생산 2023년 수치는 추정치임.
출처: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 "지역소득",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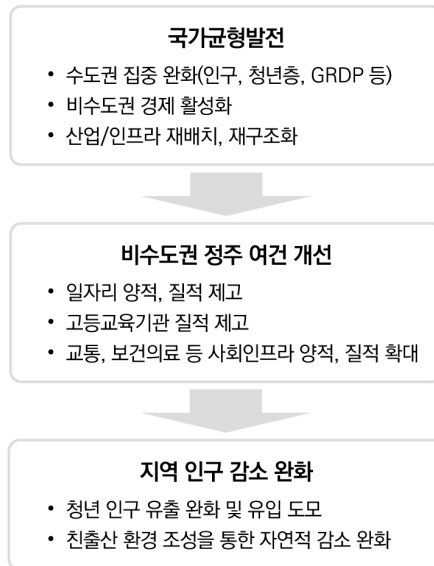
인구와 지역내총생산은 각각 2019년, 2015년부터 비수도권을 추월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의 권역 간 불균형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도권·비수도권의 인구 규모 및 지역내총생산 격차는 앞서 살펴본 지역 인구 감소가 결과적으로 지역 불균형 심화, 국가균형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거시적 문제로 확대될 개연성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장인수 외, 2025). 즉 지역 인구 감소는 단지 지역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완화 등 국가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한 통합적 거버넌스 기반 체계를 구축하여 인구, 경제, 교육, 주거, 복지 등 다분야 연계 전략이 국가균형발전과 유기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장인수 외, 2025).

3 나가며

지역 인구변동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의 목적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상황 판단 및 여건 진단에 기인한다. 이는 지역 인구변동 특성이 지역의 정책 수요, 추진 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도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역 인구변동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인구 감소지역 중 사례 지역(A지역) 인구의 자연적 감소는 전국적 인구의 자연적 감소 시점보다 20여 년 이상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 지역 인구 감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본격적 정책 대응에도 불구하고 시의성 측면에서는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그림 6] 지역 인구변동 정책 대응 체계도



출처: “지역 인구 문제 대응 중장기 의제”, 장인수 외, 202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6.

과 비교하여 볼 때 인구감소지역이 상대적으로 많
이 포함되어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5세 단위 연령
대별 순이동 양상에서는 특히 20대 연령층의 순유
출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
구 규모의 차이는 2019년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추
월한 이후 그 격차가 심화되었다. 지역 인구 분포의
공간적 집중도를 반영하는 지니집중비, 델타지수의
증가가 이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규모 및 지역
내총생산 격차 심화는 중앙정부의 거시 사회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지역 인구변동
대응 방향은 보다 거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
다. 비수도권 거점 개발을 통해 인구 분산을 유도함

으로써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
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하고 특례 제도를 시의성 있게 활용
함으로써 정주 여건을 내실 있게 개선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과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
의 도모는 결이 다른 정책 방향이라기보다는 공통
적으로 지역 인구변동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측면
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국가균형발전은 비수도
권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인
구 감소 완화와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장인수 외,
2025, 그림 6). ㉔

참고문헌

- 국가데이터처. (2023. 12.).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국내인구이동통계**.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지역소득**.
 이지혜, 장인수, 임준경, 김은정, 이지혜. (2025). **인구변
 동 모니터링 및 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2022). **인구통계 모니터링을 위한 연
 보 작성 시범 사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인수, 우해봉, 박종서, 정찬우. (2021). **2021년 인구
 변동 모니터링과 정책과제: 지역 인구 감소를 중
 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인수, 최인선, 김은지, 김은정, 이지혜, 황남희, 이지혜.
 (2024). **2024년 인구변동 모니터링 및 연보**.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장인수, 박종서, 황안나, 고제이, 이소영, 이지혜, 방설아,
 어광수. (2025). **지역 인구 문제 대응 중장기 의
 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이철, 이순미, 정학성, 박대식, 안규미. (2022). **인구감
 소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방안**.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Region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Chang, Insu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article aime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by examining the main characteristics of regional demographic change in Korea, which has recently become a major social challenge. The key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natural decline in regional populations is estimated to have begun approximately 20 years before the decline in the total population which began in 2020. Second, from a socioeconomic perspective, regional population loss is largely attributable to net out-migration, particularly among individuals in their 20s. Third, regional disparities in demographic changes—including differences in population size and age structure—are contributing to socioeconomic polarization between reg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regional population decline and widening interregional disparities require more comprehensive and fundamental policy responses at the national level.